



2011 년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국어 개요

- 정부 성과 측정은 오랫동안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돼 왔다. 그렇지만 2008 년 시작된 재정경제위기 여파로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부분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용을 줄이며 행정 혁신을 장려할 것인지 등을 현명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적기의 정확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실 2010 년에 많은 OECD 국가들이 정부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거나 정부 인력규모를 감축하게 되었다. 2011 년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추진 중인 긴축 정책으로 제기된 이슈와 정책 사안에 큰 의미를 갖는다.
- 2011 년 한 눈으로 보는 정부 보고서에는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분석하고 벤치마킹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60 개에 이르는 측정지표를 모아 회원국과 협력국에 제공한다. 본고에는 정부 활동의 전체 “생산 체인”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는바 거둬들인 세입에 대한 정보, 고용과 급여 및 정부 지출 차원의 투입 지표, 교육, 의료, 세무 행정 등의 특정 분야와 정부 전체의 산출 및 성과 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 눈으로 보는 정부 보고서에는 투명성과 청렴, 규제 거버넌스, 공공서비스 인력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행정 관행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정책 접근법과 되고 안 되는 정책사례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해주며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에 정보를 주는 것이 그 취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주체이며 이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 도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기업과 개인의 행동 규제, 소득 재분배 등의 책임을 진다. 정부 활동의 영향 범위는 2009 년에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지출이 평균적으로 거의 GDP 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수 있다. 이는 같은 해에 PPP 기준 1 인당 약 16,000 달러에 상당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보장이 최대 지출 항목이었는데 2008 년 총지출에서 그 비중은 평균 34% 정도였다. 총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문은 의료(총지출의 14.7%), 일반 공공서비스(이자지불액을 합쳐 13.1%), 교육(13.1%) 등이었다. 정부는 지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대고용주이기도 하다. OECD 내 총 노동인력의 평균 1/4 이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로 국가정부들은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켰다.

한 눈으로 보는 정부 보고서 자료는 위기를 전후하여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의 2000-07 년 기간에 OECD 회원국들은 정부지출을 평균 GDP 의 0.6%P 로 줄였으나 경제위기에 접어들면서 2008-09 년 OECD 정부지출 비중이 GDP 의 4.9%P 로 늘어났다. 이 증가분의 일부만 줄어든 GDP 를 나타내며 나머지 부분은 위기에 맞서 시급했던 금융시스템 안정화 보장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야기된 정부지출 증가를 나타낸다. 2007-09 년 GDP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정부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국가는 아일랜드(12.1%P 증가)와 에스토니아(10.8%P 증가)였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거나 안정시키도록 상당한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OECD 국가의 공공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OECD 의 일반적인 견해다. 향후 몇 년 간 재정정책이 가질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OECD 에서서는 각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한 예상 수치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2026 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시키는 데에만 보통 2010 년 재정 상태에서 잠재 GDP 의 거의 4%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보험과 연금 등의 노화 관련 비용으로 인한 지출 압력을 해소하려면 향후 15 년간 평균 GDP 의 3%P 에 상응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 간에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기를 바라는 서비스 수준과 이 서비스를 위해 국민들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공공서비스의 감축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다.

2010 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설문조사에 응했던 OECD 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공공서비스 인력 규모를 감축시킬 개혁을 개시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말한 국가는 4 분의 3 이상이였다. 또한 15 개 OECD 국가들이 퇴직자의 자리를 충원할 인력의 대체비용을 수렴했는데 그 비율은 스페인처럼 최저 10 명 근로자 중 1 명꼴에서 이스라엘, 한국처럼 최고 10 명 중 8 명꼴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의 보수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공공부문의 상당히 평등주의적인 급여 체계를 보여준다.

OECD 에서서는 처음으로 핵심부처에 있는 중앙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공무원, 중간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비서들의 보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급여와 임금뿐 아니라 사회수당과 미래 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총보수액을 OECD 국가별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들을 보면, 2009 년 고위공무원들의 PPP 기준 연간 총보수액이 평균 235,000 달러를 약간 밑돈 수준이었던 반면 경제학자나 통계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약 9 만 달러였다. 수석비서, 사무비서들은 PPP 기준으로 연평균 5 만 달러에서 6 만 달러를 받았다. 이들 데이터로 알 수 있듯 공공부문의 급여 체계는 상당히 평등주의적이어서 차관 또는 수석행정관과 동격으로 볼 수 있는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정책분석가보다 2 배, 평균 비서보다 4.5 배 높은 보수를 받는다. 2011 년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전문직의 평균 소득과 관련하여 교사,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급여나 연간 수입에 대한 데이터도 담고 있다.

정부에서 “위험이 높은” 직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사적인 이해 공개는 사회적 감시를 위해 항상 요구되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는 금융당국, 조달기관, 세무 및 세관직 등의 “위험이 높은” 직무 담당자에 요구된 정보공개와 함께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의 3 부에서 요구된 사적인 이해 공개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내놓는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직무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막고자 공직자들의 정보 공개와 외부직책 겸임 또는 선물을 금지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한편 OECD 회원국의 63%가 금융감독관에게 이전 직장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이 이러한 직무 담당자에게 소득원이나 소득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치 않는다.

온라인 정부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기업들이 계속 시민을 능가하고 있다.

시민과 기업들은 모두 정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디지털 채널을 점점 선호하고 활용한다. 그렇지만 최근 해에 유럽위원회가 조사한 OECD 회원국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졌음에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여전히 기업들이다. 2010년 평균적으로 기업의 약 80% 정도가, 시민의 약 40%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했다. 기업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해가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기업들의 광대역 사용이 더 많았고 정부가 공공조달 등의 활동에 전자통신매체 활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가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유망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도약하려면 더 많은 사용자에 의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들은 정부 정보 및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키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자유법(FOI)은 열린 정부의 근본 기둥이며 투명성 제고, 정부책임 강화, 정책결정과정에서 올바른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2010년 열린 정부 설문조사에 응한 국가 가운데 하나를 제한 모든 국가들이 정보에의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자유 법률 및 규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FOI 법의 효력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모든 단계의 정부에 수직적으로 뻗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전체에 수평적으로 뻗은 경우는 회원국 중 약 절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모든 OECD 회원국들이 선제적으로 정보 공개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 유형은 다양하여 예산 자료, 부처별 연간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공개하지만 공무원 명단과 급여를 발표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OECD 국가에서는 행정 정보를 개방형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는 기타 당사자들이 공개정보를 다시 활용하고 혁신을 촉진토록 유도한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전략적인 사고와 강한 리더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략적 미래예측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 역량 강화는 앞으로 미래 위기를 해소하고 변하는 여건에 적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OECD 정부들이 중앙정부에서 전략적 인력관리 관행을 활용하는 범위를 보여주는 신규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해 인력계획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이러한 관행을 단지 임시변통으로 시행하는 국가도 적잖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웃소싱 그리고 고/또는 서비스 제공에 정보기술 결합 가능성 등은 인적자원계획의 고안에 있어 관심을 덜 받는 사안들이다. 변화하는 추세와 시민의 요구를 고려해 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정부 전체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려면 강력하고 유능한 고위공무원들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고위공무원을 일반적인 고용 구조에서 분리된 별도의 계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몇몇 OECD 국가들은 유능한 차세대 고위공무원들을 그들의 커리어 초기에 알아보고 이들의 성과 평가를 더 중요시하여 이들이 최고 성과를 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에 다른 국가보다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조달 지출은 그 범위가 상당히여 위협과 동시에 기회를 준다

OECD 지역의 공공조달시장은 그 예상 규모가 보통 GDP 의 12%를 초과한다. 따라서 정부들이 혁신과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 지출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녹색구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도입한 국가는 57%에 불과하며 녹색 기준을 토대로 결정된 계약의 건수나 가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국가는 거의 없다. 동시에 이러한 거래는 그 범위와 복잡성으로 인해 낭비, 부정행위, 부패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위협 요소들을 줄이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11 년 한 눈으로 보는 정부 보고서에 나온 주요 결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증거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역할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각국 자료는 물론 프로젝트, 보충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www.oecd.org/gov/indicators/govataglance. 본고에는 StatLinks 서비스도 제공되어 독자들이 주요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